

남성 중년층 노동시장 안전한가?

정 성 미*

I. 문제 제기

‘고용불안’이란 일종의 불안심리로 1990년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고용불안’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용어들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고용의 불안정성(instability)과 불안전성(insecurity)을 들 수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이고 고용의 불안전성은 ‘타인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즉, 고용불안이란 무엇보다도 ‘실직의 두려움’으로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조만간 이 상태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고용불안이 증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남재량, 2005).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통념상 ‘실직의 두려움’의 의미를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에까지 확장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을 고용여건의 저하와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정의한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고용불안의 문제는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으로 입직 이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노동사회의 핵심인력으로서 매우 안정적인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년 남성층에게도 해당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오정’, ‘삼팔선’ 등의 유행어는 외환위기 이후 이들에 대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중년층의 범위를 35~49세로 한정짓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가중된 고용불안이 중년층에 어떤 임팩트가 있었나를 살펴보고, 외환위기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이전과 이후의 남성 중년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이들의 고용불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II. 중장년층 노동시장 특징

1. 중년층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표 1>은 외환위기 전후 10년인 1995년부터 2005까지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인 중년남성(35~49세)의 노동시장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중년 남성의 노동시장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세 연령범주 중 35~44세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반면, 45~49세에서는 증가율과 절대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남성 중년층에서 95~97%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각 연령층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표 1> 남성 중년층 노동시장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35~39세					40~44세					45~49세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 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 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 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 인구
1995	2,082 (4.3)	2,019 (97.0)	1,986 (4.9)	33 (1.6)	63 (-6.9)	1,522 (6.8)	1,470 (96.6)	1,450 (7.1)	21 (1.4)	51 (4.4)	1,222 (3.5)	1,163 (95.2)	1,148 (3.9)	15 (1.3)	59 (0.5)
1997	2,181 (3.0)	2,114 (96.9)	2,075 (1.7)	39 (1.8)	67 (-1.8)	1,733 (6.2)	1,666 (96.1)	1,637 (5.2)	29 (1.7)	68 (27.4)	1,294 (2.7)	1,225 (94.7)	1,208 (1.8)	18 (1.4)	69 (18.1)
1999	2,179 (-0.6)	2,097 (96.2)	1,983 (0.0)	114 (5.4)	82 (6.4)	1,944 (5.6)	1,840 (94.7)	1,732 (5.1)	109 (5.9)	104 (28.7)	1,377 (4.0)	1,288 (93.5)	1,205 (3.6)	84 (6.5)	89 (21.7)
2001	2,138 (-0.8)	2,038 (95.3)	1,969 (-1.1)	69 (3.4)	100 (9.4)	2,086 (3.1)	1,966 (94.3)	1,898 (3.0)	68 (3.4)	120 (8.0)	1,580 (7.6)	1,466 (92.8)	1,416 (8.7)	50 (3.4)	114 (8.5)
2003	2,113 (-0.4)	2,014 (95.3)	1,962 (-0.5)	52 (2.6)	99 (5.9)	2,156 (1.0)	2,046 (94.9)	1,999 (2.0)	47 (2.3)	110 (-11.7)	1,799 (6.8)	1,673 (92.9)	1,634 (6.3)	39 (2.3)	127 (7.7)
2005	2,144 (1.1)	2,042 (95.2)	1,980 (0.9)	62 (3.1)	102 (1.1)	2,124 (-1.1)	2,011 (94.7)	1,956 (-1.6)	55 (2.7)	112 (2.3)	2,004 (5.3)	1,853 (92.4)	1,804 (4.9)	49 (2.7)	151 (7.6)

주: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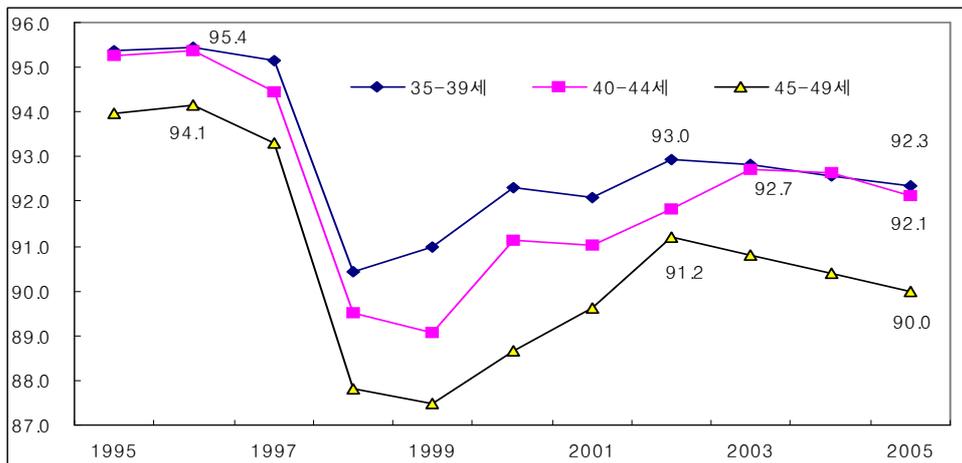
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의 경우 35~39세에서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취업자가 감소하다가 2005년에 들어서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40~44세의 경우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하다 2005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45~49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취업자 증가율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흡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인 고용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각 연령층에서 94~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2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45~49세에서는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로 인해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94.1%)보다 4.1%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남성 중년층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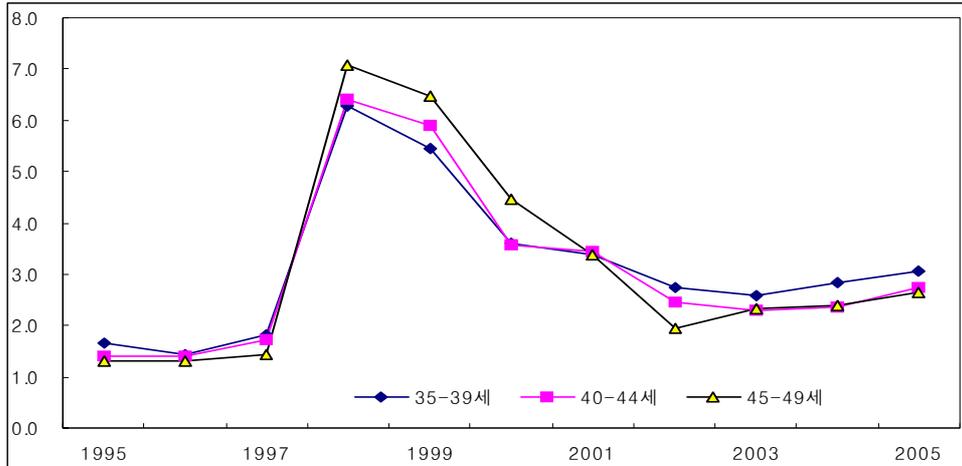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그림 2]의 남성 중년층 실업률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각 연령층 모두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2%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6~7%로 급등하였다. 비록 1999년 이후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실업률도 더불어 하락하였으나 2002년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5~39세의 연령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2000년 이후의 취업자 증가율 감소에서 기인한다. 즉,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인구보다 취업

[그림 2] 남성 중년층 실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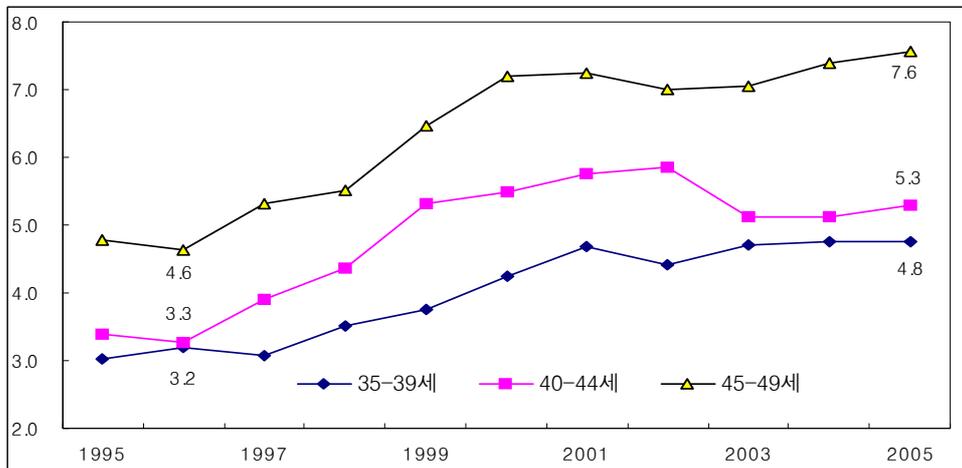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의 증가가 더 컸던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는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로 실업률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년층의 실업과 함께 노동력의 유희화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가 넘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그림 3] 남성 중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단위 : %)



주 :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각종 불로소득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핵심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년층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오는 인구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35~44세에서 3%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45~49세에서는 4.6%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45~49세의 경우 7.6%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다. 즉,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중년층에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경제활동 등의 미취업 상태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환위기의 구조조정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도 취업여건의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핵심노동계층의 고용 불안한가?

고용상태의 불안정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의 연도별 임금근로자 분포추이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먼저 35~39세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100%로 봤을 때 1995년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74.7%,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비슷한 비중인 13.1%, 12.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하락추세를 지속하였고 2001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약 3.3%포인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95년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8.7%의 비중을 보일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절대적 수치까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를 넘는 수준을 보이다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40~44세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1.2%에 비해 약간 감소하여 69%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5~39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약 4.1% 감소하여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0~44세의 경우 임시근로자 역시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11.8%였던 임시근로자 비중이 2005년 17.9%까지 증가하였고, 증가세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9세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해 1995년 70.8%에서 2003년 65.3%까지 하락하였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67.9%까지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직후 약 1% 가량 감소하였지만 이후 꾸준히 17%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

<표 2> 남성 중년층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35~39세				40~44세				45~49세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5	1,270 (100.0)	949 (74.7)	166 (13.1)	155 (12.2)	818 (100.0)	582 (71.2)	96 (11.8)	140 (17.1)	635 (100.0)	449 (70.8)	68 (10.8)	117 (18.5)
1997	1,329 (100.0)	933 (70.2)	232 (17.4)	164 (12.4)	934 (100.0)	646 (69.2)	138 (14.8)	150 (16.1)	652 (100.0)	455 (69.8)	84 (12.8)	113 (17.4)
1999	1,290 (100.0)	888 (68.9)	245 (19.0)	156 (12.1)	1,017 (100.0)	702 (69.0)	158 (15.5)	157 (15.5)	640 (100.0)	431 (67.2)	97 (15.2)	113 (17.6)
2001	1,280 (100.0)	884 (69.1)	263 (20.6)	132 (10.3)	1,139 (100.0)	785 (68.9)	190 (16.7)	164 (14.4)	745 (100.0)	494 (66.3)	124 (16.6)	127 (17.1)
2003	1,339 (100.0)	942 (70.4)	271 (20.3)	125 (9.3)	1,189 (100.0)	825 (69.4)	205 (17.3)	159 (13.4)	893 (100.0)	583 (65.3)	158 (17.7)	152 (17.0)
2005	1,425 (100.0)	1,017 (71.4)	284 (20.0)	124 (8.7)	1,225 (100.0)	846 (69.0)	220 (17.9)	159 (13.0)	1,027 (100.0)	697 (67.9)	152 (14.8)	178 (1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는 반면, 임시근로자는 다른 연령계층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 14.8%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남성 중년층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거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중년층에서의 고용불안정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지속적인 증가도 고용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안정한 노동계층의 확대와 정규직 등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표 3>의 남성 중년층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2002년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35~39세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2년 18%에서 2004년 25.3%까지 약 1.5배 정도 증가하다가 2005년 소폭 감소했다. 반면, 40대에서는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40~44세는 약 1.3배, 45~49세는 약 1.7배 정도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표 4>의 남성 중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우선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35~39세는 정규직 대비 77%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금씩 개선되어가던 임금격차가 2005년 들어 조금 더 심해졌다. 40~44세의 경우는 2004년에 임금격차가 많이 해소되었으나 2005년 들어 격차가 더욱 심해져 71%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45~49세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 비해 임금격차는 2002년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59.6%까지 하락해 월평균 15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점차 심해지는 임금격차는 근로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신규 일자리창출이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위주로 생겨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남성 중년층 비정규직 비중

(단위: 천명, %)

	35~39세		40~44세		45~49세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068 (82.0)	234 (18.0)	911 (77.7)	261 (22.3)	613 (76.8)	185 (23.2)
2003	1,040 (79.9)	261 (20.1)	905 (76.9)	272 (23.1)	635 (72.1)	246 (27.9)
2004	1,024 (74.7)	346 (25.3)	860 (72.0)	335 (28.0)	667 (70.4)	281 (29.6)
2005	1,077 (75.8)	345 (24.2)	868 (71.7)	342 (28.3)	713 (69.7)	310 (30.3)

주: 사용하는 자료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조사되지 않아 2002년 자료부터 사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8월 원자료, 각년도.

<표 4> 남성 중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단위: 만원, %)

	35~39세		40~44세		45~49세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94 (100.0)	149 (76.8)	210 (100.0)	139 (66.2)	213 (100.0)	143 (67.1)
2003	217 (100.0)	160 (73.7)	239 (100.0)	155 (64.9)	241 (100.0)	147 (61.0)
2004	224 (100.0)	176 (78.6)	246 (100.0)	182 (74.0)	260 (100.0)	157 (60.4)
2005	233 (100.0)	180 (77.3)	258 (100.0)	185 (71.7)	267 (100.0)	159 (59.6)

주: 1) 3개월간 평균임금임.
 2) 사용하는 자료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조사되지 않아 2002년 자료부터 사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8월 원자료, 각년도.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는 각 연령별 취업자 대비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35~49세의 연령층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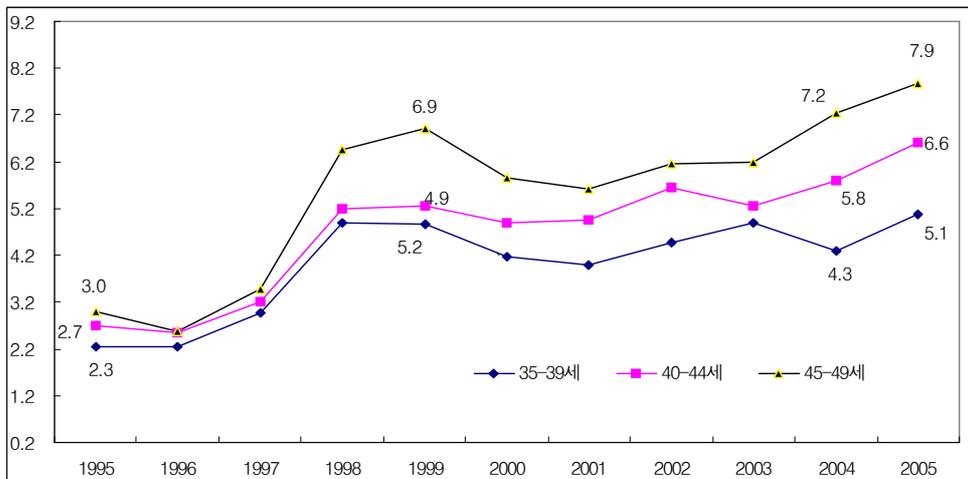
1) 단시간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고용불안을 높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남재량, 2005).

2.3~3.0% 정도에 불과한 낮은 비중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발생 직후 그 여파가 경제전체로 퍼져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후 경제가 다시 안정되면서 다소 하락하였지만 200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35~39세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증가세도 가파르지 않은 반면, 연령이 높은 45~49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증가해 2005년 7.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고용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4] 남성 중년층 단시간근로자 비중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5]는 각 연령층 실업자 대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직실업자는 실업자들 중 과거에 직장을 가졌던 경험, 즉 취업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중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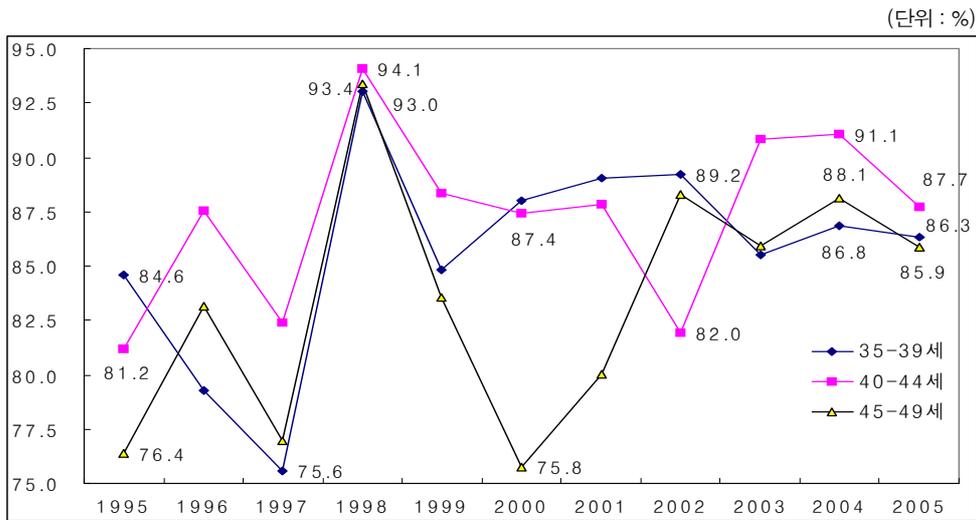
중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인 35~39세는 외환위기 이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1995년 84.6%를 기록했고 연령이 높은 45~49세에서 그 보다는 낮은 76.4%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자를 비롯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전연령층에서 근속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실업자들이 대거 진입해 중년층 모두 93~94%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45~49세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연령층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근속기간이 1년도 채 되기 전 실업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은 등락을 반복하다 2005년 85.9~87.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보다 ‘퇴출’이 쉬운 불균형적인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생계를 책임지고, 저축보다 지출이 많은 중년층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여 사회안정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 중년 남성 1년 미만 전직실업자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IV. 결론

외환위기 이후인 1990년 후반부터 고용불안이라는 일종의 불안심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졌다. 사회통념상 고용불안은 무엇보다도 ‘실직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계층인 남성 중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남성 중년층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과연 우리 사회의 핵심노동계층에 고용불안이 존재하는가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중년층의 연령은 35~49세로 한정되었으며 세부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외환위기 이후 35~49세의 중년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해 구조조정 이후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된 이후에도 취업여건의 악화로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크게 늘어 중년층에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45~49세에서 커지고 있어 고용불안뿐 아니라 근로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비중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연령이 높은 45~49세에서 증가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고용불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퇴출'과 관련한 유연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35~39세 연령층의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45~49세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년층 전반에 걸쳐 고용불안이 증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중년층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일구는 중년층에 고용불안 및 임금격차 심화문제는 근로빈곤층을 양성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가 맡아야 하는 부담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동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중년 노동자들이 취업을 포기한 채 빈곤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노동력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45~49세의 연령층에서의 고용불안의 심화는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1]

<참고문헌>

- 남재량 외(2005),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손민중(2005), 「최근 고용불안의 원인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43호.